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4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8년 12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의 실태와 변화 추이 ¹⁾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굿네이버스의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아동권리 지표 및 아동권리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태 및 수준과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이행 증진을 위한 제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Key message

굿네이버스는 2016년에 이어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두 번째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권리 실태와 변화 추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2018년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은 70점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의 권리 영역별 보장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에 비해 2018년 지역별 아동권리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정적 권리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부정적 발달 결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 참여권, 모든 권리의 영역은 균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 차별 없는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누려야 한다.
-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4호의 내용은 2018년 12월 발간 예정인 굿네이버스의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Situation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며, 2018년도의 합계출산율은 1.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²⁾.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구의 양적관리와 함께 질적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즉,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태어난 한 아이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아동의 현재 삶에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행히 2017년~2018년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고, 실제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2018년도에는 아동수당법이 제정, 시행되어 2018년 12월 현재 만 0세~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욕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아동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불평등한 경제적 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근로환경,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 등에서 아동의 행복한 삶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는 권리 경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아동권리 실태조사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며, 아동권리 수준의 지역적 격차를 최소화하고 아동권리 보장 환경과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마련 등의 근거자료가 된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 권리의 종합적 수준과 변화 수준에 대하여 파악하고 국가적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권리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적, 제도적 개선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에 이어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9,176명(총 18,35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2차)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세한 결과는 다음의 아동권리 이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Part 1.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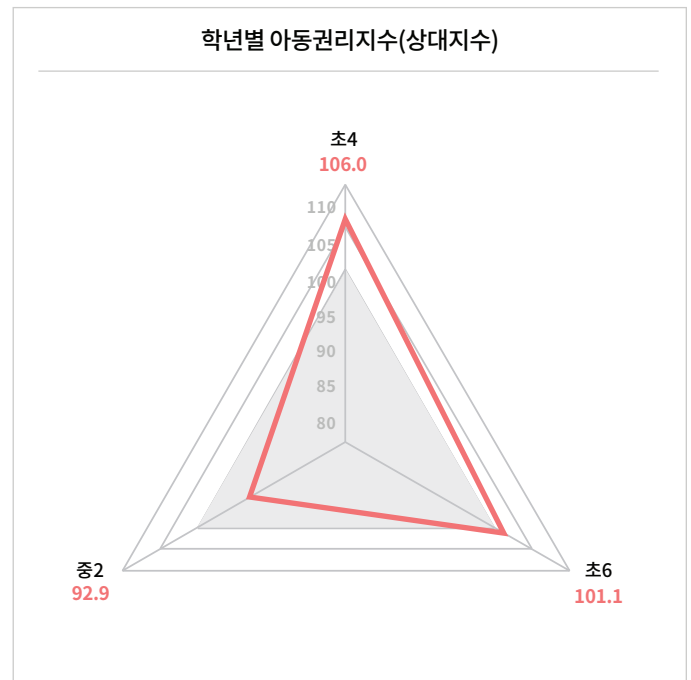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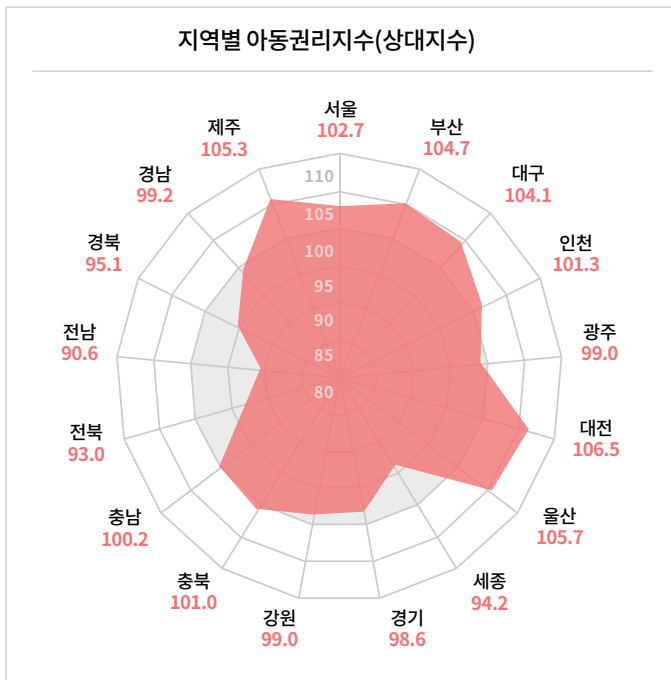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상대지수(이하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와 절대지수(이하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는 평균(100점)을 중심으로 동일 시점에서 “대상별(ex. 지역, 학년)” 아동권리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는 데 용이하며,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다른 시점, 즉 “시기별(ex. 연도별)” 아동권리의 수준 “변화”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다. 이에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를 통해 지역별, 학년별 2018년 아동권리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를 통해 2016년과 2018년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 2000명이고, 합계출산율은 0.97명이다.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100점 보다 높으면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100점 보다 낮으면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개 시·도중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106.5점으로 대전이었으며, 울산(105.7점), 부산(104.7점), 대구(104.1점), 서울(102.7점)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경북(95.1점), 세종(94.2점), 전북(93.0점), 전남(90.6점)은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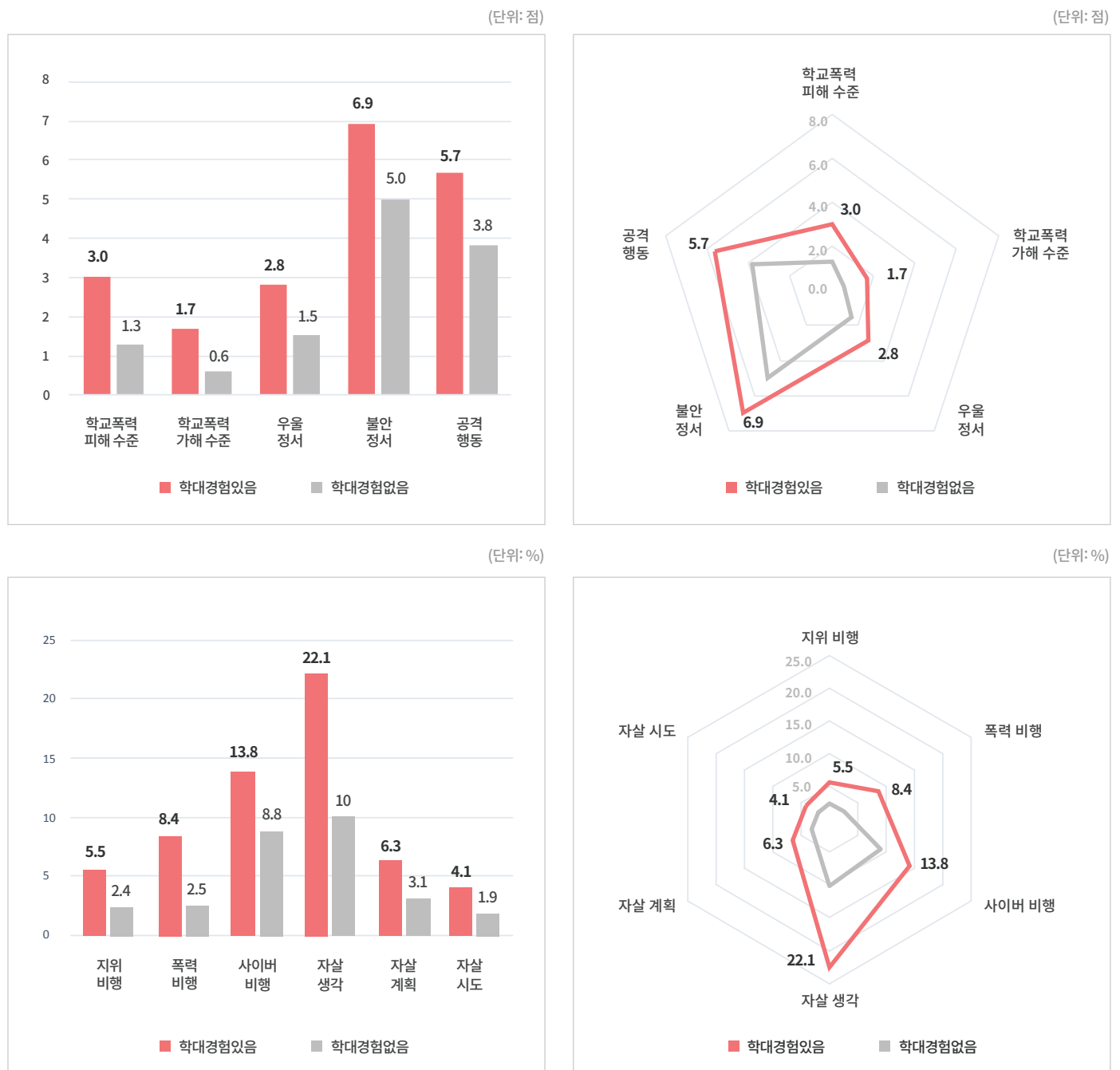
학년별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를 살펴보면, 초 4학년이 10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초 6학년(101.1점), 중 2학년(92.9점) 순으로 나타났다. 초 4학년과 초 6학년은 평균(100점)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중 2학년의 경우에만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지역별 결과이다. 평균 100점 기준으로 90점과 110점 사이에 모든 지역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2018년에도 2016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서울 등의 대도시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소도시가 다수 분포된 경북, 전북, 전남 등의 지역이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역 간 격차는 2016년 13.3점(최고점: 부산 107.0점, 최저점: 전북 93.7점) 대비 2018년 15.9점(최고점: 대전 106.5점, 최저점: 전남 90.6점)으로 더욱 커진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아동의 권리 경험과 아동의 발달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번 연구에서는 2018년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내 세부지표 중 하나인 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여부³⁾에 따라 아동의 발달 결과가 어떠한 경험 빈도를 보이고 어떠한 수준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발달 결과의 부정적 수준이 높고, 부정적 발달 산물의 경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우울정서, 불안정서, 공격행동,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사이버 비행,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경험과 발달 결과]



- 학교폭력 피해 수준, 학교폭력 가해 수준, 우울정서, 불안정서, 공격행동: 숫자가 높을수록 각 수준(점)이 높다고 해석
- 지위비행, 폭력비행, 사이버비행,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숫자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경험율(%)이 높다고 해석

3) 아동학대 경험 여부: 신체학대(가벼운 신체학대,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심각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관한 16개 아동학대 지표 중 1가지 이상 항목에 대한 부모(또는 가족)에 의한 학대경험의 여부(학대경험 있음, 학대경험 없음)

Part 2.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 실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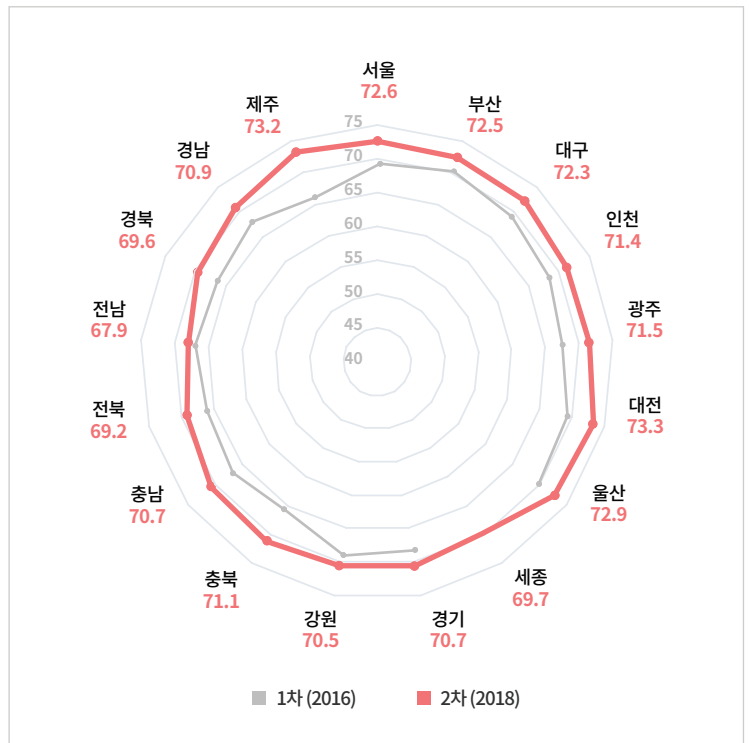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절대적 아동권리지수는 시점별, 즉 연도별 변화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2016년과 2018년의 절대적 아동권리지수는 각 69.2점(2016년), 71.2점(2018년)으로 나타나 2016년에 비하여 2018년 아동권리 수준이 다소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시도 중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동권리지수의 상승이 있었는데, 특히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의 총 9개 지역에서 2점 이상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영역의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권(89.6점), 발달권(72.7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7.1점) 순으로 권리수준이 높았고, 보호권의 경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아동권리지수 상승 폭이 큰 영역은 발달권(68.7점→72.7점)과 참여권(52.5점→57.1점)으로 두 영역 모두 4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권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하나, 여전히 50점대로 가장 낮은 보장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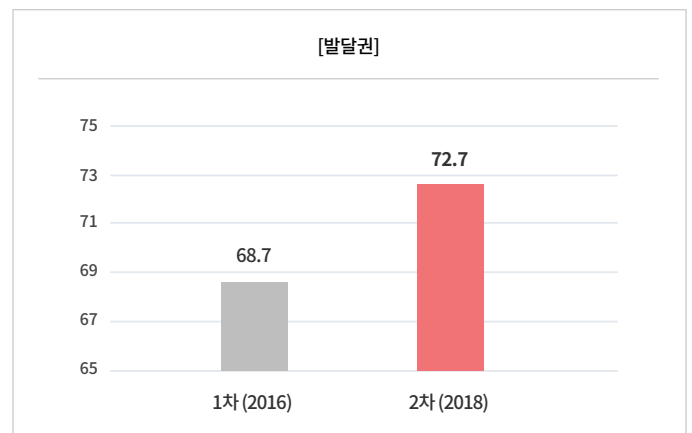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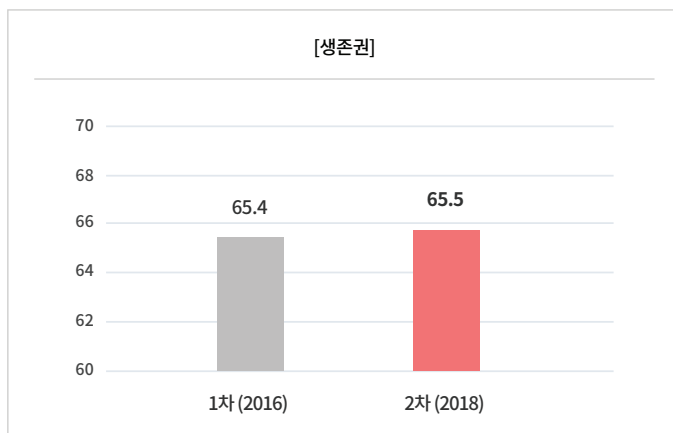
[지역별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지역	1차(2016)	2차(2018)	증감
서울	70.6	72.6	2.0
부산	71.6	72.5	0.9
대구	70.5	72.3	1.8
인천	69.3	71.4	2.1
광주	68.3	71.5	3.2
대전	70.1	73.3	3.2
울산	71.0	72.9	1.9
세종	-	69.7	-
경기	69.6	70.7	1.1
강원	70.3	70.5	0.2
충북	67.1	71.1	4.0
충남	68.4	70.7	2.3
전북	67.8	69.2	1.5
전남	68.6	67.9	-0.7
경북	67.9	69.6	1.7
경남	69.2	70.9	1.8
제주	67.4	73.2	5.8
전체	69.2	71.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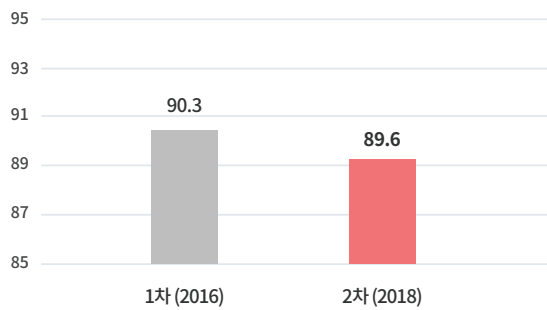


· 2016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시도, 2018년에는 세종을 포함한 17개시도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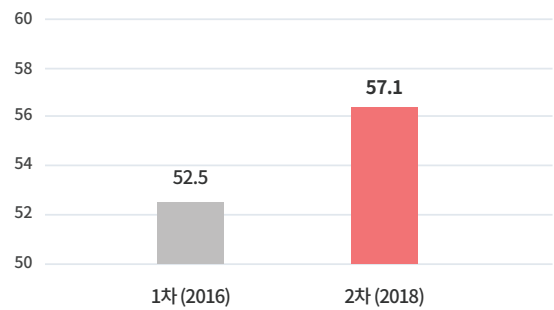
[권리영역별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보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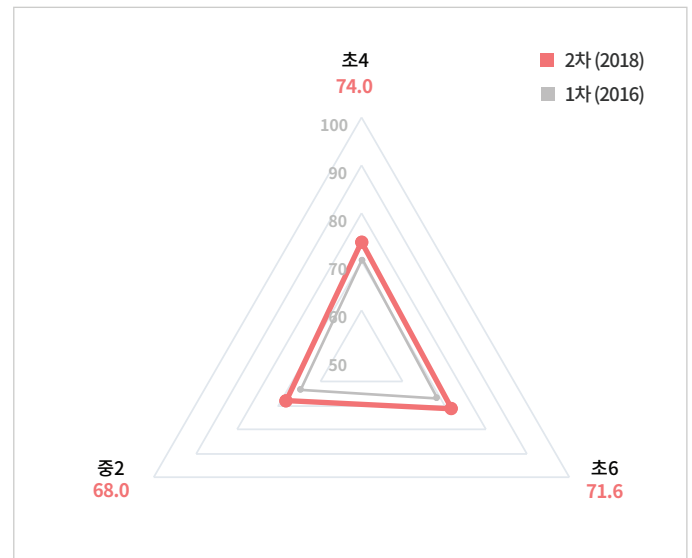
[참여권]



[학년별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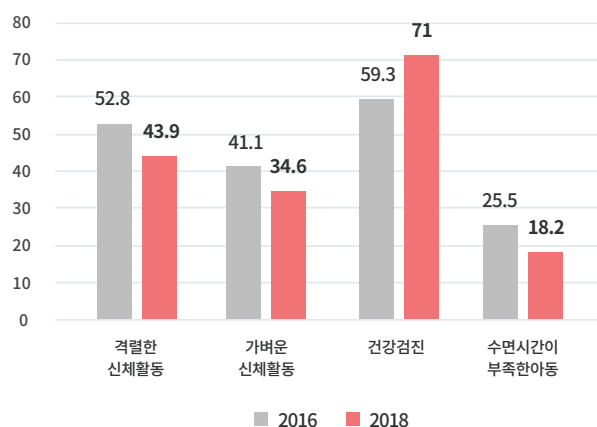
종합	1차(2016)	2차(2018)	증감
초4	72.1	74.0	1.9
초6	70.2	71.6	1.5
중2	66.4	68.0	1.7

학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년에서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아동권리지수가 상승하였다. 학년별 증감 폭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초4학년이 1.9점, 중 2학년이 1.7점, 초 6학년이 1.5점으로 각각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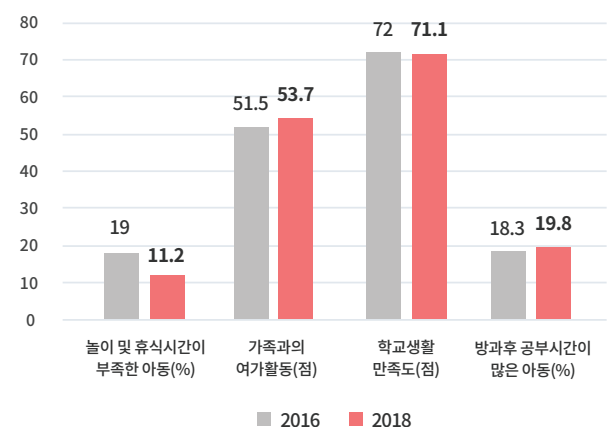


[생존권 아동권리 지표 변화]

(단위: %)



[발달권 아동권리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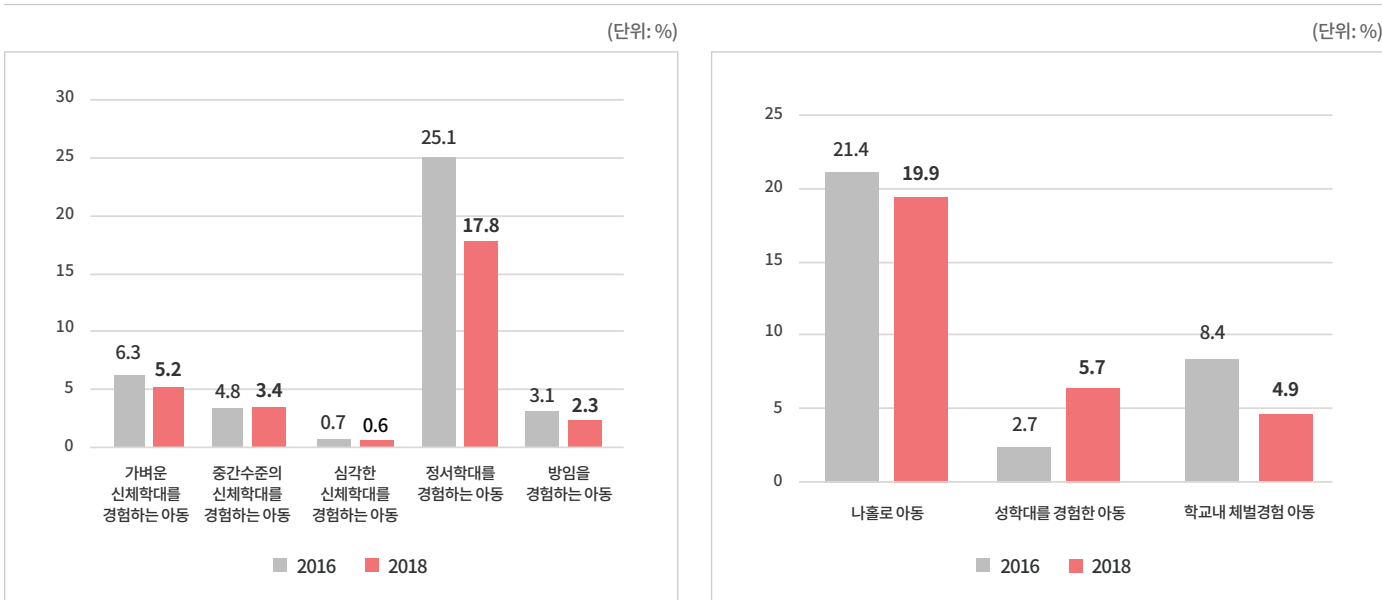
아동권리지표로 권리영역별 주요 세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존권 지표 중 건강활동 영역의 주요 변화는 아동의 신체활동 수준이 2016년에 비하여 2018년에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격렬한 신체활동과 가벼운 신체활동이 각 8.9%, 6.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11.7% 가량 증가하였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은 7.3%가 감소하였다. 즉, 아동의 수면만족도 수준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달권 지표 중 교육·여가 영역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16년에 비하여 2018년에 ‘학교생활 만족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방과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한 아동의 비율은 1.5% 상승하여 2016년 보다 2018년도에 방과 후 공부시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아동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의 비율은 감소(19.0% → 11.2%)한 반면 ‘가족과의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정도’는 51.5점에서 53.7점으로 상승하여 아동 및 부모가 평가하는 여가생활 수준이 2년간 소폭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호권 아동권리 지표 변화]



보호권 지표 중 학대 영역의 주요 변화는 가정 내에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나홀로 아동’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이 2016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6년에는 여러 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25.1%)를 경험했다고 보고한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8년에는 ‘나홀로 아동’(19.9%)이라고 보고한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2016년 25.1%에서 2018년에는 17.8%로 감소했고,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3.1%에서 2.3%로 감소했다. ‘나홀로 아동’의 경우 2016년 21.4%에서 2018년 19.9%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른 학대 유형의 경험 감소 비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다음으로, 학교 내에서의 물리적 폭력 경험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을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 역시 8.4%에서 4.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성학대(성희롱 포함)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2.7%에서 5.7%로 높아져,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2018년 동안 있었던 미투 운동, 스쿨미투 등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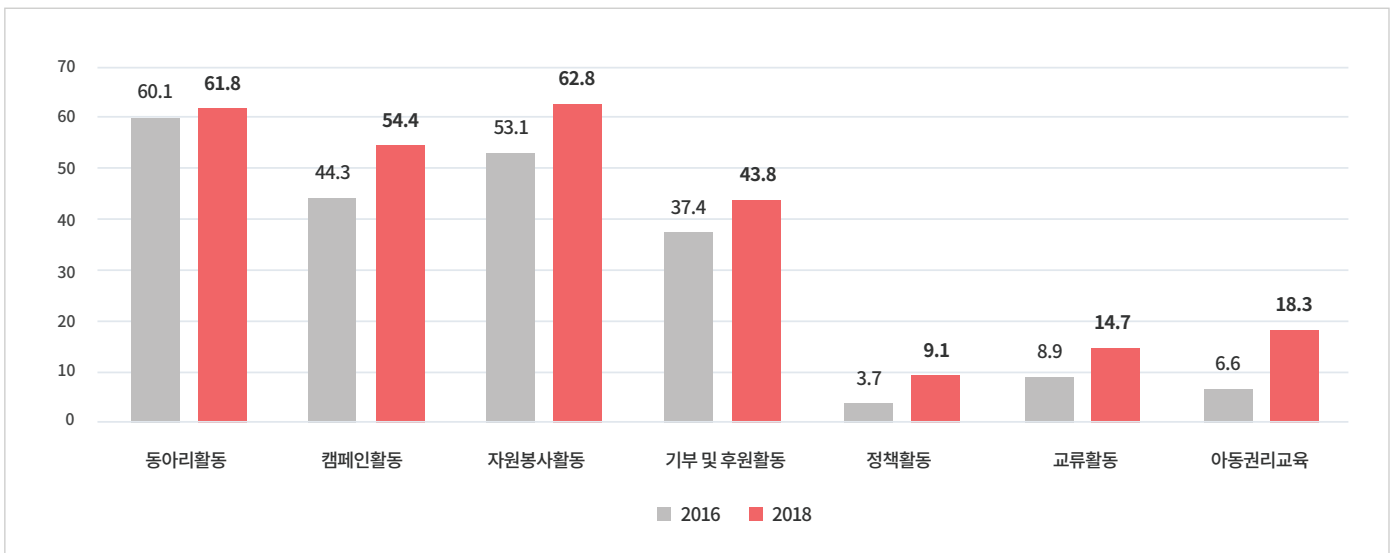
참여권 지표 중 참여활동 영역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 아동의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참여활동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모든 참여 활동에서 아동의 경험 비율이 증가하였다. 다양한 참여 활동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참여활동은 ‘정책’ 활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자치위원회 등)으로 2016년에 3.7%에서 2018년에 9.1%로 5.4% 상승하였다.

한편, 이러한 증가폭은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한 아동의 비율에서 더욱 컸다.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한 아동은 2016년에 6.6%였으나 2018년에 18.3%로 1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100명 중 약 7명의 아동 정도가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하였다면, 2018년에는 100명 중 약 18명 정도가 아동권리 교육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

[참여권 아동권리 지표 변화]

(단위: %)



Recommendations

생존권 · 발달권 · 보호권 · 참여권, 모든 권리의 영역은 균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로 본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은 71.2점으로, 2016년(69.2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각 영역별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8년에 가장 많은 상승이 있었던 영역은 참여권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50점대로 권리 영역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 참여권의 취약성을 보여주기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 아동권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의 평균은 70점대이지만 각 권리영역별로 점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존권 65.5점, 발달권 72.7점, 보호권 89.6점, 참여권 57.1점으로 각 영역별의 점수가 50점대부터 80점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보편적으로 충분히 향유하고 누려야 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한 불균형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동이 누려야 할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는 각각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함에 있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 자체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난 참여권과 생존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 차별 없는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누려야 한다.

지역별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를 살펴보면,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2016년(13.3점) 대비 2018년(15.9점)에 더욱 벌어져 지역 간 편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누리게 될 권리 보장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인프라 환경, 사회적 인식 등이 아동권리지수와 관련성이 높았다. 특히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동과 밀접한 동네의 위생적 환경, 시설 및 기관 이용 수준, 학교시설 등이,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는 동네 안전감, 학교 풍토, 아동권리 인식, 가족과의 여가 활동, 놀이 및 여가 시간 등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미시적 인프라 환경이 아동의 권리 수준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여진다. 아동을 위한 더 좋은 환경, 아동에게 더 친근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용어 그대로 아동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증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정부 또한 아동권리 보장 수준의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인프라와 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맞물려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배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아동권리 수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산지원과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시키는 책무성을 국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년별 아동권리지수(상대지수) 점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동권리경험과 아동발달 결과를 살펴본 각각의 지표에서, 긍정적 지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부정적인 지표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대경험 여부에 따른 아동의 발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아동의 부정적 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우울정서, 불안정서, 공격행동, 지위 비행, 폭력 비행, 사이버 비행,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지표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즉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아동의 발달결과는 아동학대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교육, 복지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 정책은 아동의 연령이나 각 부처의 정책 수행의 고유 목적에 따라 각각 관할 부처가 상이하다. 즉, 아동을 중심에 두고 범부처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2015년에 마련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통합과 조정이 시도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관계된 조직과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박세경, 2018).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아동의 권리 보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수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과 제도 마련, 실행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아동관련 정책 실제 아동의 복지 등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그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아동정책에 대한 체계관리 기제 마련 및 아동 정책 유효성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균형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굿네이버스(2018). 2018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 -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 자료집. 2018.11.23. 발표
- 박세경(2018).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추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 72-94.
- 이유진·김영한·윤옥경(2018).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18). 2018년 6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황옥경·한유미·김정화(2014). 한국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권리학회.